

형 법 (19)

문 1.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‘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’고 규정한 구 「약사법」 제44조 제1항의 ‘판매’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‘수여’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.
- ②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「형법」 제12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.
- ③ ‘블로그’, ‘미니 홈페이지’, ‘카페’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경우를 「국가보안법」 제7조 제5항의 ‘소지’행위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.
- ④ 의사가 환자와 대면하지 아니하고 전화나 화상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한 행위를 구 「의료법」상 ‘직접 진찰한 의사’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.

문 2. 범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결과발생을 요구하는 침해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시된 사실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위험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의 결과 발생이 필요하다.
- ② 형법 제158조의 장례식방해죄는 장례식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구체적 위법범에 해당한다.
- ③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,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.
- ④ 균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 이탈한 기간 동안 행위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계속범에 해당한다.

문 3.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판례가 있으면 그에 따름)

- ①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던 중 매수인의 착오로 1,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이 초과지급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수령한 경우,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.
- ② 할부금융회사에 대한 할부금채무만 남아 있을 뿐 그 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가압류집행이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없는 중고자동차를 매도하면서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와 같은 부작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甲은 모텔 방에 투숙하여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. 이 화재로 인하여 투숙객들이 사망한 경우에 甲에 대하여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.
- ④ 피고인이 갑과 토지 지상에 창고를 신축하는 데 필요한 형틀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, 갑이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쌓아 둔 건축자재를 치우지 않고 공사현장을 막은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.

문 4. 과실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갑은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어 경기보조원(캐디)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.
- ②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,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, 의료행위의 특수성은 고려대상이 아니다.
- ③ 건물 소유자가 안전배려나 안전관리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거나 그러한 계속적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지 않은 채 단지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는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의 ‘업무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
- ④ 행위가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,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.

문 5. 피해자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ㄱ. 피고인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,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이에 대한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있다.
- ㄴ. 승낙의 주체는 승낙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의미하므로, 승낙하는 자는 민법상 행위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.
- ㄷ. 피해자의 승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행위한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가 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.
- ㄹ.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 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생존 당시 작성한 것처럼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발행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.

- ① 1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2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3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4개

문 6. 실행의 착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자 소송을 제기한 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.
- ㄴ.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하였다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가 없다.
- ㄷ. 간첩의 목적으로 외국 또는 북한에서 국내에 침투 또는 월남하는 경우에는 기밀담지가 가능한 국내에 침투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.
- ㄹ. 허위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.
- ㅁ. 甲이 강간할 목적으로 乙의 집에 침입해 안방에 들어가 누워 자고 있는 乙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간음을 기도하였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.

- ① ㄱ, ㄴ, ㅁ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, ㅁ
- ③ ㄴ, ㄷ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ㄴ, ㄹ, ㅁ

문 7.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, 「형법」 제21조 제1항에서 ‘방위하기 위하여 한’은 정당방위의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규정함으로써 해석된다.
- ㄴ. 판례는 위법성조각을 위해 방위의사나 피난의사와 같은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요구된다고 본다.
- ㄷ. 위법성조각을 위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, 행위자가 행위 당시 존재하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을 인식하지 못한 채 범죄의 고의만으로 행위를 한 경우 고의기수범이 성립한다.
- ㄹ. 위법성 판단에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가 모두 요구된다고 보는 이원적·인적 불법론의 입장에서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경우 행위반가치가 부정되므로 불능미수가 된다고 본다.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
- ③ ㄴ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ㄷ, ㄹ

문 8.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책임능력의 판단기준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을 규정하는 형법 제10조는 책임의 근거로 인간의 의사자유에서 구하는 도의적 책임론에 입각한 규정으로 해석된다.
- ②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에 의하면 고의에 위법성인식을 포함시켜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서 고의설을 채택하게 된다.
- ③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이라고 이해하는 경우 형법이 심신상실자를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.
- ④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이라고 이해하는 경우 범죄능력이 부정되면 범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범죄가 아니다. 따라서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, 단지 보안처분만 과할 수 있다.

문 9.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
- ㄱ. 형사미성년자라도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야 책임능력이 부정된다.
- ㄴ. 단순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ㄷ. 농아자는 청각기능과 발음기능 모두에 장애가 있는 한 정책임능력자로서 임의적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다.
- ㄹ. 행위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가 인정된다.
- ㅁ. 법원이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법률적 판단이지만,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한다.

- ① 1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2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3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4개



문 14.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①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들은 말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.
- ②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.
- ③ 인터넷 아이디(ID)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,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도 아이디에 대한 모욕행위는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.
- ④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.

문 15.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- ㄱ.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금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절도죄가 성립한다.
- ㄴ. 甲이 상사와의 의견 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·관리해 오던 이른바 비자금 관계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.
- ㄷ. 피고인이 갑의 영업점 내에 있는 갑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1~2시간 후 갑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 두고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.
- ㄹ.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, 그 회사 소유의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.

- ① 1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2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3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4개

문 16.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시하여 의제자백의 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,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이상 소송사기가 성립한다.
- ㄴ.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 본인 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.
- ㄷ.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고 그 진정성립 등에 관한 위증을 교사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, 등기까지 한 경우 사기죄를 구성한다.
- ㄹ.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더라도 이용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피고인이 사용이 정지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휴대전화를 구입한 후 이른바 '대포폰'으로 유통시켜 사용하도록 하거나 '유심칩(USIM Chip) 임기'를 통하여 해당 휴대전화의 문자발송제한을 해제하고 광고성 문자를 대량 발송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
- ① 1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2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3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4개

문 17.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주점의 종업원에게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에 있어 위 종업원은 주류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②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한다.
- ③ 사립학교 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.
- ④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갑을 유인·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강도상해로 기소된 경우, 준강도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.

문 18. 문서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 
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졸업증명서 파일은 그 파일을 보기 위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모니터 등에 이미지 영상을 나타내게 하여야 하므로,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.
- ㄴ.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소에서 작성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설령 그러한 공무소가 실존하지 않아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만, 사문서의 경우에는 법인이 실존하지 않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ㄷ.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여 주민등록증상의 명의인 이름으로 이동전화의 가입신청을 하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한다.
- ㄹ. 甲이 타인 행세를 하며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다음 경찰관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타인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, 타인의 이름이 기재된 수사과정확인서에 무인을 한 경우, 甲에게 사서명 등 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등 행사죄가 인정된다.

- ① 1개            ② 2개            ③ 3개            ④ 4개

문 19. 판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경우는 몇 개인가?

- ㄱ. 피고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D시장에게 출원하였고, 담당공무원이 출원사유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첨부서류가 진실한 것으로 경신한 나머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한 경우
- ㄴ. 피고인이 관할 전화관서의 직원과 공모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전화가입청약순위를 속여 전화가설이 된 경우
- ㄷ.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한 경우
- ㄹ. 건물점유자로 명도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정당한 권능이 있는 자가 실효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주장한 경우

- ① 없음            ② 1개            ③ 2개            ④ 3개

문 20. 뇌물죄에 대한 설명이다. 아래 ㄱ부터 ㄹ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(O, X)가 바르게 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금품이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.
- ㄴ.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서 방조한 경우,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성립한다.
- ㄷ.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.
- ㄹ.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, 제3자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각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.

- ① ㄱ(O) ㄴ(X) ㄷ(X) ㄹ(X)
- ② ㄱ(X) ㄴ(O) ㄷ(O) ㄹ(X)
- ③ ㄱ(X) ㄴ(X) ㄷ(O) ㄹ(O)
- ④ ㄱ(X) ㄴ(X) ㄷ(O) ㄹ(X)